

전남도, 목포·영암·해남 일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차 전진기지 육성...탄소중립·연 1천500억 시장 선점 기대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전남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이 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4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전남도의 3번째 성과물이다.

전남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오는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 원, 지방비 40억 원, 민자 26억 원, 총 159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다. 도내 알비티모터스 등 9개 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

개 연구기관,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

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조 전기차 산업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조 시 중량 변화에 대한 주행 안전성시험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도를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구상이다.

도가 자체 용역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태백화물차량운전면허학원 노후차 등 국내시장 7천400억 원, 동남아 수출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등 6천 150억 원, 총 1조 3천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남도가 연간 1천500억 원의 시장을 선점할 전망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9개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4천185억 원의 매출 증

가가 예상된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벨리 조성과 개조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 48개 기업 유치, 1천8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기차 시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 및 연비규제 강화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전기차 개조 산업을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기자

광주시 민생경제대책본부, 폭염대비 '시민 건강한 무더위 나기' 총력 지원

21개 사업에 310억 투입, 취약계층 민생지원 추진

광주광역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더위 극복 및 시민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4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등 17개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원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국비 245억원, 시비 52억원 구비 14억원 등 총 310억원이 투입되며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1식당 1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인상(월 1만5000원)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시간 탄력운영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 ▲외국인아동 누리과정보육료(28만원) 지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추가지원(월 10만원) ▲노숙인 폭염 보호대책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선지급 ▲고려인마을 이주민 냉방용품 전달 ▲재활용품 수거인 냉방용품 지급 ▲폭염저감시설 설치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무더위쉼터 조성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홍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장애인가족 돌봄지원시간 확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방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하는 폭염 대응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도 공유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은 6.3%, 광주는 6.6%를 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무더

위까지 더해져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본부를 통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8일 고물가·고금리·고금리 3중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7개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100일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교육청, 폭염대비 취약계층 학생 가정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4일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의 후원으로 '아이시원' 지원비를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아이시원' 사업은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 가정당 냉방비 20만 원, 냉방용품 10만 원 상당이 지원되며 총 114세대 3천420만 원 상당이 지원됐다. 해당 세대는 관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및 지역의 복지관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

한편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관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와 연계해 조식지원사업(아침머핀)을 지원 중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의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하는 위기가동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전달받은 한 중학교 학부모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사용할 엄두가 안나고 선풍기는 고장이 나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번 냉방용품 전달이 너무 반가웠다"고 전했다.

/이문수기자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2차 회의에 참석해 무더위 극복 및 시민 건강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이치산업개발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면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층당구 다자간, 조경시설, 옥상, 창고형대, 외부재 및 마감, 포장계획, 시공을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